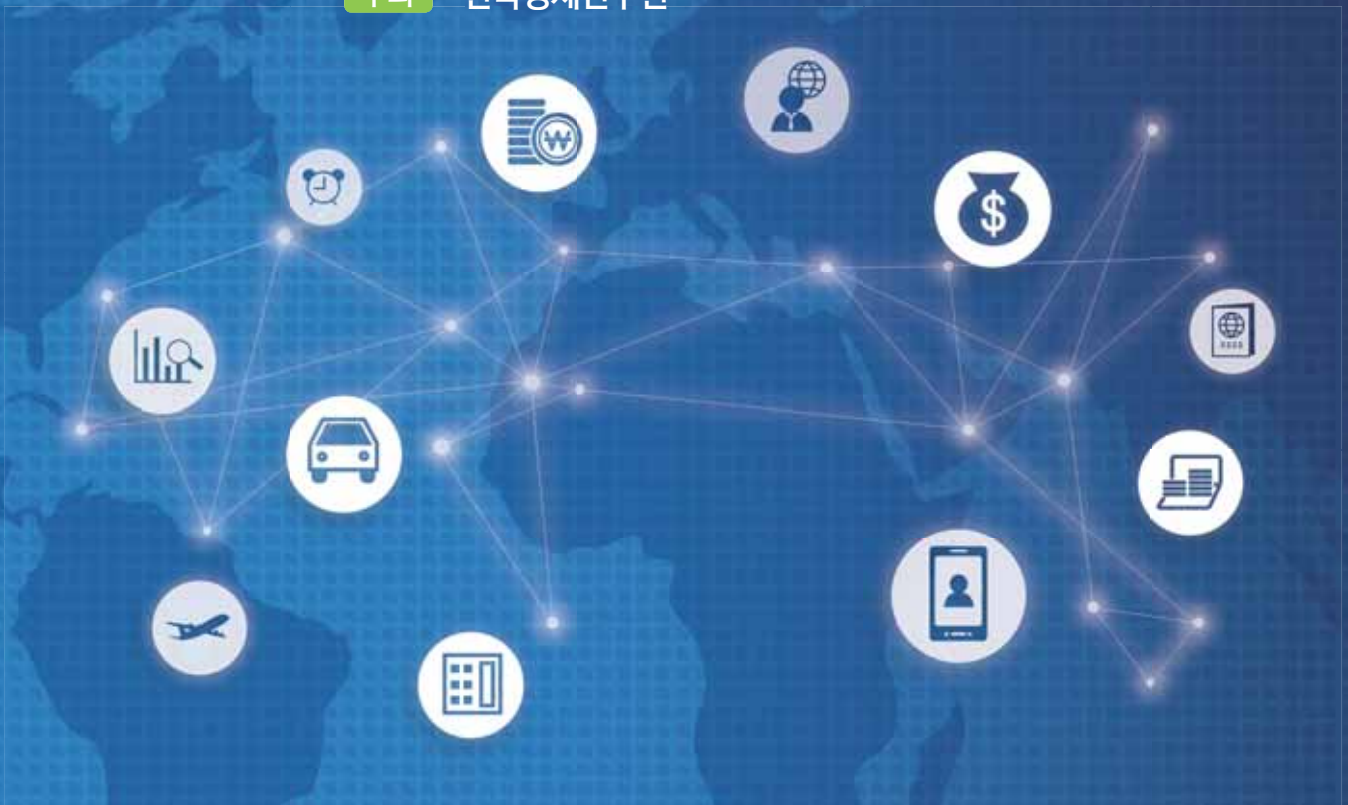


미국 차기 트럼프 정부와 한국 경제 · 외교 안보에 대한 시사점

일시 2016. 11. 10(목) 15:00~16:30

장소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룸

주최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좌담회]

미국 차기 트럼프 정부와 한국 경제·외교 안보에 대한 시사점

- 일시: 11월 10일(목) 15:00~16:30
- 장소: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룸

초대의 글

지난 8일, 미국 선거인단 선출을 통해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미국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향후 한국 경제와 외교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주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후 한미FTA 재협상 논의 등 대미 수출환경은 가장 핵심적인 논의사항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경선기간동안 한미FTA와 NAFTA를 재협상해야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오바마정부 보다 훨씬 더 강한 무역보호주의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핵과 사드배치 등 미국과 관련된 외교안보 이슈는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북아정책에 따라 여러 안보 현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외교·안보정책도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견제해왔으나,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대처할 것인지가 향후의 우리 외교안보 상황을 가늠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미국 차기 트럼프정부와 한국 경제·외교안보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정책좌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좌담회가 미국 차기정부의 정책을 전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경제와 외교안보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와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한국경제연구원장 권 태 신

PROGRAM

시 간	내 용
14:30~15:00	등 록
15:00~15:10	개 회 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15:10~15:40 [30']	<p>[발 제]</p> <p>사 회: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 통상교섭본부장)</p> <p>발제1: 미국 차기 트럼프 정부의 통상무역정책과 시사점 - 허 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p> <p>발제2: 미국 차기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시사점 - 신성원 (국립외교원 교수)</p>
15:40~16:30 [50']	<p>[종합토론]</p> <p>사 회 -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 통상교섭본부장)</p> <p>패널토론 - 김성환 (한양대 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최석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전 주제네바 대사) 신성원 (국립외교원 교수) 허 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p>
16:30	폐 회

미국 차기 트럼프 정부의 통상무역정책과 시사점

허 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분석과 대응방안

허 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공화당 정강 및 대선공약 분석

- ‘미국 우선 (America First)’ 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공식 추대한 공화당이 정강 정책에서도 확실하게 트럼프 구호를 반영해 강경한 신고립주의 보호무역을 표명
 - 초안으로 공개되고 있는 2016년 공화당 플랫폼(정강정책)에서는 무역정책에서 가장 특별한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남
 - 공화당은 TPP를 폐기하고 한미 FTA, 북미자유무역 협정 (NAFTA) 등을 모두 재협상하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추이에서 이탈할 것을 선언
 - 2016년 공화당 정강정책 초안에 따르면 미국 우선에 더 유리하게 협상된 무역합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¹⁾
- 트럼프는 2016년 7월 21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 연설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아직 비준되지 않은 TPP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힘²⁾
- 트럼프는 무역과 세금³⁾ 등에서 전면적 변화를 추구. 또한 트럼프는 TPP 상

1) “We need better negotiated trade agreements that put America first. When trade agreements have been carefully negotiated with friendly democracies, they have resulted in millions of new jobs here at home supported by our exports. When those agreements do not adequately protect U.S. interests, U.S. sovereignty, or when they are violated with impunity, they must be rejected.” (Republican Platform Draft, 2016, pp.2)

2) “I am going to withdraw the United States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which has not yet been ratified.”

3) 트럼프는 과표 구간을 4단계로 개편하며, 모든 한계세율을 인하. 해외에서 발생한 기업들의 수익은 일률적으로 10%의 법인세율을 부과 할 것을 공언하였다. 현재 10%, 15%, 25%, 28%, 33%, 35%, 39.6%의 7구간에서 개인소득 \$2.5만, 부부합산 소득 \$5만 0%, \$5만/\$10만 10%, \$15만/\$30만

대국이 크게 양보하지 않을 경우 보복관세 부과 혹은 파기를 주장

□ 트럼프가 집권하는 경우 미국의 TPP 탈퇴는 기정사실로 보임

○ 이 경우 TPP는 미국이 빠진 11개국의 재협상 혹은 TPP 협상 자체의 폐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큼

- 트럼프는 TPP가 불공정성하며 미국을 유린하는 협정으로 궁극적으로 미국이 아닌 중국에게 이득을 주는 협정이라고 비난하고 있음⁴⁾

□ 트럼프는 한-미 FTA가 NAFTA와 함께 재협상의 대상임을 명확히 공약으로 내세움. 따라서 트럼프가 집권하면 한-미 FTA는 재협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 공화당 정강 또한 ‘미국이 자국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항 조치를 취해야 한다⁵⁾’ 고 명시

- 2012년 정강에도 대항 조치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는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으나 이번 초안은 그 대상이 중국을 넘어서 한국과 멕시코 등 주로 대미 무역 흑자국들을 겨냥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 한미 FTA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트럼프가 공언해 왔듯이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방위비 분담 (cost sharing) 요구와 함께 FTA 개정 협상 압력을 줄 수도 있음

20%, \$30만 이상 25% 부과 예고하였으며 상속세 폐지, 헤지펀드 매니저에 대한 세금 부과. 기업들의 해외소득에 대한 조세유예제도 폐지등도 공약하였다

4) “Donald Trump said Tuesday that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rade deal was a “rape” of the United States.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is another disaster done and pushed by special interests who want to rape our country — just a continuing rape of our country,” the likely Republican presidential nominee said at a rally in St. Clairsville, Ohio. “ (Washington Post, S. A. Miller, June 28, 2016)

5) “When those agreements do not adequately protect U.S. interests, U.S. sovereignty, or when they are violated with impunity, they must be rejected.” (Republican Platform Draft, 2016, pp.3)

대응 방안

- 한국은 TPP가 폐기되는 경우 일본을 포함하는 선진국과의 새로운 경제 통합체를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 발 보호주의 통상압력에 대비해야 함
 - CJK FTA와 RCEP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되 빠르게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통합체 모색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한-미-일 (J- KORUS) FTA , NAFTA+JK(한국, 일본), 혹은 NAFTA + 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한국이 주축이 되어 중간매개자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만함. 이는 유사시 대중국 혹은 동아시아 내에서의 한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미국 발 보호주의 압력에 대비하여 기업의 부가가치 고도화와 함께 근로자 중심의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기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측에서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이익의 균형을 맞춘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경우 미국의 극단적인 보호무역조치들이 한국산 제품에 발동될 경우를 대비하여 상품별 점검을 철저하게 하는 한편 우리 내부의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한 엄격한 실태조사와 함께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들은 과감하게 철회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저금리에 달러 약세를 선호하며 금융규제 완화와 FRB에 대한 통제 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며 적극적인 재정확대와 동시에 감세를 주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외교 안보 측면에서의 글로벌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라 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

<표 1> 무역에 있어 미국 대통령이 행사 할 수 있는 권한

관련조항 Name of statute	시행 조건 Authorization trigger	대통령 권한 Presidential powers
통상 협정 (Trade Agreements)		
NAFTA Implementati on Act of 1993	Proclamation of tariffs 관세 부과 선포	Proclamation of tariffs Proclaim return to MFN tariffs on imports from Canada and Mexico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수입 되는 제품에 MFN 관세율 적용
	Maintain general level of reciprocal concessions with Mexico and Canada 멕시코와 캐나다와 일반적 상호호혜적인 수준을 유지	Proclaim additional duties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Congress 의회와 협의 따라 추가 관세 부과 선포
제한적인 영향 Limited statutes		
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b)	Finding of an adverse impact on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수입이 국가의 안보를 침해할 때	Impose tariffs or quotas as needed to offset the adverse impact 수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만회하기 위해 관세나 쿼터를 부과
Trade Act of 1974, Section 122	Large and serious US balance of payments deficit 미국의 심각한 국제수지적자발생시	Impose tariffs up to 15 percent, or quantitative restrictions, or both for up to 150 days against one or more countries with large balance of payments surpluses 상당한 국제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에게 150일간 15%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양적 제한을 둘 수 있음
Trade Act of 1974, Section 301	Foreign country denies the United States its FTA rights or carries out practices that are unjustifiable,	Retaliatory actions, at presidential discretion, including tariffs and quotas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관세 혹은 쿼터 등을 이용한 보복 행위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외국이 미국의 FTA 권리를 부인 하거나 불공정 혹은 불합리, 차별적인 행위를 보일 때	
준 무제한적 영향 Almost unlimited statutes		
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	During time of war 전시	All forms of international commerce, plus the power to freeze and seize foreign-owned assets of all kinds 모든 형태의 국제 상거래 및 모든 종류의 외국 소유 자산 동결 및 압류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77	National emergency 국가 비상상황	All forms of international commerce, plus the power to freeze foreign-owned assets of all kind 모든 형태의 국제 상거래 및 모든 종류의 외국 소유 자산 동결 및 압류
FTA = free trade agreement; MFN = most favored nation; 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출처 : Noland, Marcus et al (2016) PIIE Briefing Chapter 1, September, 2016, PP. 6 Table

1. “Summary of statutes available for presidential control of foreign commerce” 인용

미국 차기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시사점

신성원 (국립외교원 교수)

미국 차기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시사점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 신성원

가. 대외정책관련 트럼프 후보 언급 주요 내용

□ 한국과 일본은 자국 방위를 위해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함.

※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용인할 수 있음.

□ 북핵문제등과 관련하여 중국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 시장 접근을 막아야 함.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외교 경제 후원국인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음.

□ 김정은이 미치광이(maniac)같지만 무자비한 정권 장악력은 인정해야 함.

※ 북한 핵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IS 격퇴에 군대를 파견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미국은 사우디산 석유를 구입하지 말아야 함.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서유럽 NATO 국가들이 보다 많은 역할을 해야 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NATO는 변해야 함.

나.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 트럼프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반을 실패로 규정하고 비판

—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후보의 중동정책(대이란 핵합의등), 대러시아 정책, 대중국 정책등을 비판

□ 트럼프 후보 집권시 미국은 대외정책에서 고립주의로 회귀할 가능성

— 중동, 아시아,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면서, 각국은 자국 방위를 위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

□ 방위비 분담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

※ 한국이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감축 가능성도 존재

□ 사드는 예정대로 2017년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

□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추진해 온 아시아 재균형 정책 (Pivot to Asia)은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

※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발언권이 강화될 가능성

라. 시사점

- 한미 동맹은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으나, 한미 양국은 동맹의 강화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차원으로 접근 필요
- 한일 양국이 한 목소리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공동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일 관계 강화가 필요함.
-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 동맹이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향적 자세 필요
-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팀과 전략 대화를 수시 개최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관련 긴밀 대처 필요
-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안보 문제와 무역통상 문제를 동일한 시각에서 보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외교안보와 무역 통상 문제를 동시에 조망하는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필요 .끝.

종합토론

(토론요지)

트럼프 차기 미국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시사점

김 성 환 (한양대학교 특훈 교수)

가. 외교정책 기조

-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전망
 - 미국의 국가이익 - 동맹 · 우방 - 국제안보 순으로 대외관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
 - 참모들은 트럼프후보가 고립주의자가 아닌 기능주의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인이 과도한 대외개입에 따른 피로감 등 미국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국제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줄어들 가능성

나. 대아시아정책

-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온 아태 재균형 정책은 상당히 약화 전망
 - 선거 캠페인 중에는 구체적인 아시아정책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오바마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 감안
 - 위안화 평가절하, 기후변화문제 등 경제환경 측면에서 중국이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경제적 이슈에 관해 중국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으로 전망

다.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 캠페인 과정에서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공화당 주류는 전통적으로 동맹관계를 중시하고 있어 이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다만,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액 요구 예상

— 캠페인과정에서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과 역할 증대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방위비 협상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언급

□ 북핵문제 관련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를 실패한 정책으로 비판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 예상

— 캠페인 과정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를 시사하는 언급을 했으나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지는 불분명

라. 우리에게 대한 시사점

□ 캠페인 과정에서 트럼프는 대외정책면에서의 비전문성과 구체성 결여가 드러난 바, 외교안보 진용이 꾸려지는 대로 조속히 이들과 협의하여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설명하는 조치가 시급한 상황

— 특히 북핵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양국간의 입장 조율 시급

— 예상되는 방위비분담 증액 문제는 우리로서도 사전대비 필요

□ 트럼프의 주장으로 통상분야에서는 양국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는 바, 통상문제로 인한 갈등이 안보문제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상되는 쟁점들에 대해 우리의 입장 사전 준비 필요

□ 미중관계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 새행정부의 대중정책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련된 사안은 유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일본과의 공조 방안도 강구

□ 전통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의회 공화당 인사들과의 접촉선을 적극 활용하여 새 행정부 정책 수립에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 경주

미국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대응방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최석영(토론자)

I.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

1. 공화당의 정강정책 (통상분야)

가. 국제무역이 미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심각한 무역적자는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강조

-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환율조작, 정부 구매품 중 미국 상품 제외, 미국의 중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비난

※ 16. 4월 중국, 대만, 독일, 일본 및 한국을 환율조작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나. 새로운 무역협정 협상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반으로 추진하되 협정 내용들이 미국의 이익, 자주권을 침해하거나 협정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해당 협정을 거부

- 레임덕 기간 동안 중요한 무역협정에 대한 의사결정 보류를 명문화

양당의 통상분야 정강정책

주요 이슈	민주당	공화당
무역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자유화 정책 실패 인정· 중국, 불공정 무역국가로 지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자유화 정책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심각한 무역적자 우려· 중국의 불공정무역 행위 비난
기체결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한 언급 없음
신규 무역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력한 노동·환경 표준 마련· 강력한 이행집행 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레임덕 기간 중 중요 무역협정에 대한 의사결정 금지
T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PP 체결 시 새로운 노동, 환경 등의 기준 충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TPP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협정을 거부가능성 시사

2. 보호무역관련 Bi-partisan 입법

- 가.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TPEA”) 발효 (15.6.29): (1) 신속협상공권(Trade Promotion Authority(“TPA”)) 및 TAA를 포함하는 포괄적 입법; (2) AFA에 대한 재량적 판단근거
- 나. 무역원활화 및 이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TFTEA”) 발효(16.2.24): 국경에서의 지재권 위반, 무역구제 위반제품의 감시강화

II. 미 의회동향과 통상정책

1. 미의회의 선거동향

가. 상원

(1) 현 의회구성 현황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
의석수	44	54	2

(2) 선거판세

	현의석수	비선거	안정권	우세	경합우세	경합(4)	예상의석수
민주	44+2	36	10	1	1	NH, NV,	48+1
공화	54	30	13	3	2	PA, NC	48+2

* 민주당과 연대하는 무소속 의원: 앵거스 킹(메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3) 전망

- 1) 금년도 선거대상 의석 34개 의석 중 10개는 민주당, 24개는 공화당 의석임.
- 2) 민주당이 기존의석보다 3석을 추가확보하고 대선에서 승리하여 당연직 상원의

장직을 확보하게 되면 50:50으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됨. 역으로 공화당이 기존의석보다 4석을 잃어도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상원의석 50석을 확보하여 상원 다수당을 구성할 수 있음. 현재 각 기관의 예측에 편차가 있으나 대체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전망하는 기관이 다수

3) 2016년, 2018년 및 2020년 상원의 선거대상 의석 현황

	2016	2018	2020
민주	10	23+2	11
공화	24	8	22
	34	33	33

나. 하원

(1) 현의석 구성현황

	민주당	공화당	과반
의석수	186	247	218

(2) 전망

공화당 의석은 경합된 곳이 민주당 보다 많으나 공화당이 과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봄.

2. 평가 및 전망

- (1) 미국의 통상정책은 의회와 대통령이 권한을 분점하고 있음. 의회는 입법권과 법이행의 감시권한을 보유한 반면 대통령은 의회의 위임범위 내에서 대외협상을 추진하고 협정의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의회통과된 이행법안을 서명하는 권한을 보유함
- (2) 제114대 의회의 경우 상원과 하원이 공히 공화당 지배하고 있으며, 제115대 선거에서 상원은 기존 공화당 지배구조가 도전을 받는 상황이고 하원의 경우는 공화당 지배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3) 결국 제115대 미의회의 지배구조는 민주당 상원+공화당 하원 또는 공화당 상원+공화당 하원이라는 두가지 옵션이 예상되며, 백악관을 장악하는 정당에 따라 행정부와 의회의 역학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봄.

2016년 대선 및 의회선거에 따른 시나리오

	백악관	상원	하원	무역정책 기조
시나리오 1	클린턴	민주	공화	백악관 주도의 일관성 있는 무역정책추진 가능
시나리오 2	클린턴	공화	공화	백악관과 공화당 의회간 마찰 가능
시나리오 3	트럼프	민주	공화	백악관과 민주당 상원간 마찰 가능
시나리오 4	트럼프	공화	공화	극단적인 백악관과 공화당 의회간 불협화음

- (4) 그러나, 2018년 예정된 제116대 의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선거대상 의석수가 25석이나 되어 2016년 민주당이 가까스로 상원 다수당이 된다고 해도 2018년 선거에서 다수당을 구성하는 것은 상당한 도전임.
- (5) 이런 여건은 차기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4년 중 전반 2년과 후반 2년에 구성되는 의회의 구조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국정운영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며, 대외 무역정책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III. 미국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대응

가. 대선정국에서 제기된 TPP 탈퇴 또는 NAFTA 재협상 등의 과격한 슬로건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으며 전반적으로 공화당의 무역정책 기조로 수렴되는 과정을 겪을 것으로 봄. 그러나 강도 높은 무역구제조치 시행과 무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의 증가는 불가피 할 것이며 트럼프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극단적인 정책방향(TPP 탈퇴, NAFTA 수정, 환율, 무역구제조치 강화 등)이 업계의 반발과 의회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됨.

나. 시나리오 3 (공화당 백악관, 민주당 상원, 공화당 하원)의 경우, 통상정책의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특히 상원 민주당은 AFL-CIO 등 노조의

영향이 강화되어 “공정무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무역자유화에 발목을 잡는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트럼프 후보가 과격한 무역 공약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하원 공화당은 물론 상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어려울 수 있음

다. 시나리오 4 (공화당 백악관, 공화당 상원과 하원)의 경우, 무역정책은 공화당의 정강기조에 따라 극단적인 반무역적인 성향을 표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무역역조 해소, 무역구제조치 대응, 환율 및 중국에 대한 견제는 강화될 것이며 TPP 등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온 통상정책에 대한 검토를 할 것임.

라. NAFTA/TPP: 트럼프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강도높게 비판하는 캠페인을 벌여 왔고, TPP 탈퇴 및 NAFTA 재협상을 주장해 왔음. 그러나 전통적으로 무역자유화에 우호적인 공화당 의회가 트럼프의 입장에 그대로 동조하지는 않을 것임에 비추어 기체결된 협정의 탈퇴는 가능하지 않을 것임. 다만, 공화당 내에서도 TPP의 특정 조항 또는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의회인준을 위해 협정의 수정은 불가피할 것이며 상이한 입장과 강도를 조정하는 일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임.

마. TTIP: 미국과 유럽간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ISDS, 자료이전과 개인정보보호 등이 상존하고 있고 트럼프의 극단적인 보호주의에 비추어 TTIP을 포함한 기타 무역협상의 재개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것으로 봄.

바. 미의회는 대중 무역적자와 환율조작문제에 우려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변경에 반대 입장으로서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책과 미의회의 대중국 강경론에 비추어 대중국 무역마찰은 더욱 강화될 개연성이 높음.

사. 한국은 TPP 가입, 한.미 FTA 이행, 양국 무역현안에 철저대응 필요. 끝

Note

A series of 28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notes.

Note



Note

A series of 28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no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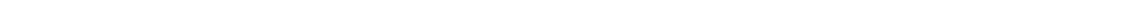
Note



Note



Note



Note

A series of 28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notes.



keri 한국경제연구원

0732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층
T. 02-3771-0010 F. 02-785-0272